국립의대 설립 '속도'…갈등 봉합·서남권 의료 확충 과제

순천대, 교수진·교육시설 구축 등 추진
의대·병원 각각 2030년·2032년 목표
준비조직 확대…2028년 예비인증 대비

목포 등 서남권 "선정 근거 공개·재검증"
전남광주시, 대학병원급 인프라 등 검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순천대와 경북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조례동 산13-3번지 일대 모습. /연합뉴스

순천대학교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교수진 확보와 교육시설 구축, 대학병원 설립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으로 오는 2030년 의대 개교와 2032년 대학병원 개원을 제시했다.

반면 목포 등 서남권에서는 선정 근거 공개 요구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 갈등 봉합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다.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순천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순천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설립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도 별도 지원단을 설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원한다.

순천대는 우선 의학교육을 담당할 교수진 확보와 임상실습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달 중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전남광주 지역 상급종합병원 등과도 임상실습과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의학교육학을 비롯한 기초·핵심 분야 교원을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이달 중 의대 설립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학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2028년 의학교육예비인증에도 대비한다.

의대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한다. 순천시·순천시의회와 부지 이관 절차를 밟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예산 확정, 설계와 착공 등을 거쳐 2030년 개교한다는 목표다.

대학병원은 사전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공사 등을 거쳐 2032년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다만 병원 건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비와 착공 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순천대 의대 정원을 60명으로 배정하면서 기존 설립 계획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순천대 관계자는 "정원 변경에 따른 설립 계획 조정과 의대·교육병원 건립 준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남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최종 선정에도 목포 등 서남권에서는 심사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서남권 국회의원과 지방정부·의회, 국립목포대, 시민사회 등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의 잠정 보류, 독립적인 재검증을 촉구했다.

이들은 목포대가 이미 확보한 부지와 순천대의 향후 부지 확보 계획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공개하고, 서남권과 도서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반영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대학 간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역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행정의 공정성과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목포문화연대도 성명을 내고 선정 과정의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평가 근거와 심사자료 공개, 독립적인 재검증을 요구했다.

서남권의대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선정 결정 철회와 원점 재심사를 요구하며 민형배 시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서남권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과 평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남광주시의 후보대학 추천을 반려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 추천 결과를 수용했다.

전남광주시는 국립의대 최종 선정을 계기로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서남권 대전환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서남권이 선정 과정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전남광주시가 의료 인프라 확충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지역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향후 국립의대 추진 과정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명진·목포=정해선 기자

호남 반도체 속도전 외치는데…지원 행정은 '헛바퀴'

AI반도체환경위 행감

중앙부처 건의·기업 민원 처리 실적 0건
삼성·SK 17차례 협의에도 채용 논의 無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등 선결과제 산적
AI컴퓨팅센터 지역 연계·고용 대책 미흡
시의회, 선제적 대응·실행계획 마련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행정 지원체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회는 4일 반도체산업지원실과 국가AI컴퓨팅센터 프로젝트추진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 지원 실적과 지역 인재 채용계획, 핵심 기반시설 확보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운영 실적은 0건"이라며 "중앙부처 제도 개선 건의와 원스톱 지원창구의 민원 처리 실적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와 부지 확보, 기반시설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은옥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민원 처리 실적이 0건이라고 해서 논의에 진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광주 군공항 내 미군 항공유 저장시설 공사를 거론하며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하고 국회 협력 조직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원호 의원(민주당·남구1)은 반도체 양산 일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2028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2029년 말 생산시설(팹·Fab)을 준공하고 불과 6개월 뒤 양산한다는 계획"이라며 "반도체 공장은 건물 준공 이후에도 장비 반입과 시험 생산, 수율 안정화 과정이 필요한데 일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진성 의원(민주당·동구2)은 지역 인재 채용 계획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과 17차례 협의했는데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논의는 없었느냐"며 "지역 채용 목표와 구체적인 대안을 미리 마련해 인재 양성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주 의원(민주당·여수6)은 여수·광양 석유화학산단 기업들의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장만 준공하려고 속도전을 하다 보면 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지역이 얻을 것은 얻어야 하는 만큼 언제, 어떻게 기업에 요구할 것인지 지금부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정책관은 "2030년 6월 초도 물량 생산 목표에서 역산된 측면이 있다"며 "공장 건설 기간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지역 인재 채용 문제도 기업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방안과 고용 창출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종국 의원은 "지난 8월 착공했는데도 산·학 연계와 기업 유치, 기존 광주 AI데이터센터·AI실증밸리와의 연계 계획 등 별도 자료가 없다"며 "산업 생태계 조성 기획연구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은 너무 늦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도 "1만2천~1만5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과대 포장하기 전에 실제 건설 현장에 지역 업체와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국가AI컴퓨팅센터 프로젝트추진단장은 "민간 참여자들과 협업해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공익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방안과 고용 창출 효과 등도 지속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소재 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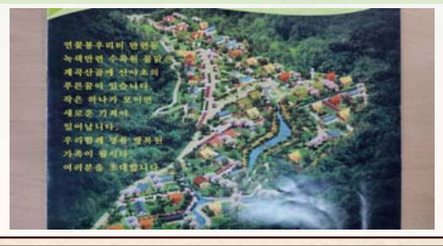
1 매물목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소재)

구 분	지 번	지 목	면 적 ㎡	면 적 평	가 격	상세내용
한 옥	514-31 (만년동길 84-13)	대 지	1,422	431	4억원	✓ 고급목재 사용 고품격 한옥 ✓ 덕룡산(용이 승천) 산세 수려 ✓ 유명 낚시터 인접
		주 택	109	33		
		사 랑 채	21	6.4		
대 지 이동식 건 물	510-43	대 지	1,055	320	1억원 6천만원	✓ 환매분으로 전원마을 중앙위치 ✓ 이동식 건물 사랑채 활용 可
		이 동 식 건 물	35	11		
미분양 대 지	510-69 外 3필지	대 지	1,000	303	1억원 2천만원	✓ 국유지 불하로 분양지연된 마지막 잔여매물
	508-35	생활근린 시설용지	606	184	1억원	✓ 한방치료(요양) 시설 적합 ✓ 공원부지(약 1천평) 인접, 활용 可
임 야	산 247	임 야 (휴양림)	19,545	5,923	평당 2만원	✓ 편백식재 5년차(국가 지원) ✓ 임도, 전기 및 수도시설 완비
	산214-13 外 5필지	임 야 (조경수)	39,872	12,082	평당 2만원	✓ 98년 산림경영승인, 임업직불금 수령 ✓ 조경수(적송) 재배, 판매중
과수원	산 245-6	임 야	6,369	1,930	평당 5만원	✓ 단감(월추) 5년생 : 250주 ✓ 농업직불금 수령
	산245-8 外 1필지	임 야	10,049	3,045	평당 5만원	✓ 단감(태추) 5년생 : 200주 ✓ 감(대봉) 300주 단감(태추)로 수종갱신중 ✓ 5평 농막, 급수시설 완료, 농업직불금 수령

2 매물소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소재)

① 마을전경

분양당시 홍보자료



만련전원마을 항공사진



② 한옥 [만봉리 514-31, 만년동길 84-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옥 매매
(나주시 봉황면 만년동길 84-13)

- 대지 : 1,422㎡ · 본채 109㎡ / 사랑채 21㎡
- 광주전남혁신도시 및 KTX 나주역 20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정된 광주공항 차로 30분
- 에너지국가산업단지 등 초대형 국책사업 인근 부지 확정
- 49세대 전원주택단지로 기반시설 완비
- 최고급 목재로 지은 한옥, 사랑채/정자(2개)/저온저장고 등 전원생활 시설완비
- 귀농, 귀촌 전원생활 최적
- 만봉리 산 245-8 외 1필지 과수원 10,049㎡ 동반매매(별도가능) 약 1.5억원 매(평당5만원), 동 과수원은 인기품종 단감(태추) 5년생으로 수확 시작, 급수/전기/수도 완비 및 관리사 1동 설치

매매가 4억원 주인 직거래

③ 대지(이동식건물 포함) [만봉리 510-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전원주택 부지매매

광주전남혁신도시 및 KTX 나주역 20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부지확정된 광주공항 차로 30분

- 대지 1,055㎡ 연 35㎡
- 이동식 주택 설치되어 있음
- 넓은 텃밭에 과일, 채소 등 재배로 여유로운 전원생활 가능
-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완비
- 주택 신축시 장기저리 융자 가능 (1세대 2주택 미해당)
- 에너지국가산업단지 등 초대형 국책사업 인근 부지 확정

매매가 1억 6천 주인 직거래

만련전원마을 추진위원장 H.P 010-8949-9376